

국방비 감축 — 아직은 시기상조

편집인 칼럼



● 羅 柄 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최근 수년간
방위비 규모는
축소되어 왔으며
더이상의 축소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근 정부의 1992년도 예산편성 및 中·長期 재정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방위비 감축문제가 거론되는데 대한 우려(憂慮)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감축론의 골격은 국제적인 탈냉전과 화해추세속에서 남 북한의 고위당국자회담과 U.N.동시가입,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제 핵안정협정 체결등 일련의 대내외적 정세변화, 특히 북한의 유화몸짓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통일이 될 것 같은 환상속에서 희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귀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상황의 독특한 二重的 구조를 심층 분석하면 향후 적어도 3~5년간은 방위비의 감축구상이 반드시 유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이유를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

첫째, 최근 수년간 방위비 규모는 계속 축소되어 왔으며

이제 더 이상의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91년도 방위예산은 7조7천4백억원이며, 92년도 정부조정 편성안은 8조7천9백억원으로서 외형 규모는 1백억불을 상회하고 있으나,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초 6%수준에서 매년 삭감되어 88년 5.2%, 89년 5%, 90년 4.3%, 91년 4%로 하향 일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외국의 경우(1988년 기준)는 미국 6.5%, 소련 12.3%, 이스라엘 16.5%, 이라크 30.7%, 북한은 21.9%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지 않은 다른 나라까지 포함한 세계 평균은 5.6%였습니다. 또한 국방예산이 정부재정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88년 32.8%에서, 89년 32.4%, 90년 30.4%, 91년 27.6%, 92년도 정부안은 25%로 연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국방을 지킬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도움과 의무 징집제도의 덕분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현재의 4만 4천명에서 '95년 이후 약 1만명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전력개선(2백억불)이 시대적인 요청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방당국은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비를 계속 축소하여 왔으므로, 이제 더 이상의 삭감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장병의 한 끼당 부식비가 3백14원으로 국민 평균 부식 7백11원의 44%에 불과하며, 병영시설도 지극히 열악한 상태이나 장병 모두가 인내로서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우리 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인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우리의 전력이 월등히 열세에 있으며

북한의 공세전력증강정책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현재 북한은 남한에 비해 常備정규군사력 면에서 1.5~2배, 여기에 즉각 정규군사력화가 가능한 예비전력을 합하면 3배 이상의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를 비롯한 각국의 통계자료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이 무기 및 장비의 고도 현대화를 감행하여 Frog 및 Scud 유도탄과 중거리 탄도유도탄까지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시리아등 해외수출은 물론 化生(화학 및 생물학적)전력을 대폭 증강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최근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내로 하는 개량형 Scud-D 地對地 유도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소형 원자폭탄을 제조할수 있는 단계라고 外信은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우리의 자주국방력은 對북한관계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 3大 군사강국으로 浮上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소련 등을 포함하는 東北亞 정세의 지정학적 여건에서 우리의 국방력이 판단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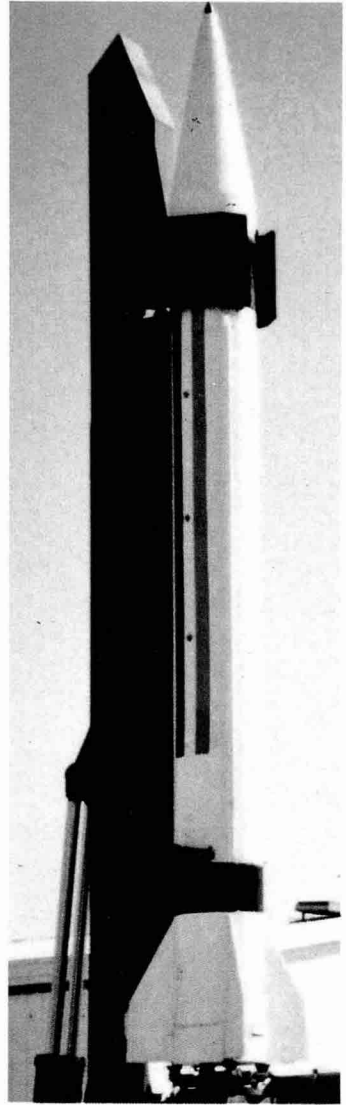
또한 절대로 軍事大國이 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있는 日本이 올해부터 1995년까지의 방위력 강화계획(新中期防)에서 약 1백6조 원(20조엔)을 투입하여, 아시아 최강의 방공망 구축과 함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최신에 미사일 도입 및 F-15 초고속 전투기의 국산화, 차기 중거리 미사일의 완전 국산화 개발에 착수하는 등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이 날로 팽창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우리의 자주국방은 심각한 위협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남북의 대치구조 아래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력의 열세 만회와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에 따른 전력보전 등을 고려하여, 방위비를 GNP대비 4~5%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공존구조 아래에서는 군비협상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것이나, GNP대비 3~4%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 통일 초기에는 남북의 군사통합비용을 고려하여 약 4%수준, 그 이후는 2.5~3.5%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백35년간 영국 및 프랑스의 군사비는 GNP대비 평균 4%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통일후 한국의 국력은 세계 10위권 내의 국가로서 OECD에 가입함은 물론 G9(G7+中·蘇)의 범주에도 도전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 최강의 4개국에 둘러싸인 상대적인 약소국을 면할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위력」의 확보는 통일 한국이 독립주권국가로서 태평양시대의 주역을 담당하는데 필수적인 요구이며, 절대 절명의 과업입니다.

최근 방위비 감축 여론이 일본의 세계3대 군사강국 浮上을 우려하는 기사와 함께 거론됨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5천년 민족수난사에서 9백60여회나 外侮에 시달려온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복지보장책은 자국국방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



북한은 최근 한반도 쏘지역을 사정거리내로 하는 개량형 Scud-D 地對地 유도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소형 원자폭탄을 제조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사진은 북한이 보유한 Scud-B와 同型인 이라크의 「알-후세인」)